

# ‘디지털성범죄 뿌리뽑나’...2000명 검거

### 김창룡 경찰청장 서면 정례간담회 가져 디지털성범죄 1993명 검거·185명 구속 1052명 기소의견 송치...941명 수사 중 “소지자 전방위 수사로 수요 원천 차단”

경찰이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통해 운영, 제작, 유포, 소지자 등 2000명을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출입기자 단 정례간담회 서면 자료에서 디지털성범죄 수사 상황과 관련해 “1549건, 1993명을 검거해 185명을 구속했다”며 “1052명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94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549건 가운데 성착취물 관련이 972건, 불법 성영상물 관련이 577건으로 파악됐다.

성착취물과 관련 1558명이 검거됐고, 그중 152명이 구속됐다. 제작·운영자는 291명이 검거됐고, 115명이 구속됐다. 유포자 306명(구속·24명), 소지자 947명(구속·8명), 기타 14명(구속·5명)이 붙잡혔다.

불법 성영상물과 관련해서는 435명이 검거됐고, 33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제작·운영자는 65명으로 그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유포자 340명(구속·20명), 기타 30명(구속·7명)도 검거됐다.

성착취물 피해자는 422명, 불법 성영상물 피해자는 408명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제작한 성영상물은 성착취물로 규정됐다. 불법 성영상물은 성착취물을 제외한 불법촬영물·불법합성물 등이다.

구체적으로 n번방 사건 관련자로는 운영 1명, 제작 4명, 유포 8명, 소지 265명이 검거됐다. 박사방과 관련해 운영 4명, 제작 1명, 유포 2명, 소지 80명, 기타 11명 등이 경찰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경찰은 하반기에 소지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n번방’ 영상 소지자에 대한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중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문형욱(25·구속기소)이 성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한 해외 클라우드 업체와 공조해 소지자 정보를 파악했고,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성착취물 소지자가 다수 발생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지자 등의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으로, 향후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과 협조해 디지털성범죄 잠입(위장) 수사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여경을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지난 3일까지 피해자 830명 중 776명을 특정해 총 3242회 보호·지원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민정기자

##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고교 여교사 직위해제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40대 여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7일 경찰과 교육당국에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도권 한 고등학교 현직 여교사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제2 B군과 1년 가깝게 만남을 이어오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B군을 지난달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밝혀지자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 A씨에 대해 지난 1일 직위 해제했으며 남학생 B군과 분리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며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신안 천사대교 차량 통행제한 6시간여 만에 해제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차량 통행제한이 해제됐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의 영향을 받았던 천사대교 차량 통행 제한이 7일 낮 12시30분 해제됐다고 밝혔다.

천사대교 차량 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추후 바람의 정도에 따라 다시 제한될 수 있다.

천사대교는 태풍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통행이 제한됐다.

당시 바람은 10분 동안 초속 25m까지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태풍경보 해운대 앞바다서 50대 추정 남성 숨진 채 발견

태풍경보가 발효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부산경찰청과 부산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9분경 해운대해수욕장 앞 바다에 시신이 떠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부산소방과 부산해경 등은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중간 지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바다에 떠 있던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을 인양했다.

부산해경은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3시에 부산과 부산앞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됐고, 오후 4시경 태풍특보는 해제되고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로 대체됐다.

## 수도권제1순환도로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 추돌

7일 오전 10시 3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수도권제1순환도로 성남 IC에서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이날 사고는 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1t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4차선을 주행 중이던 1t 화물차가 진입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1t 화물차 운전자 A(60대)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 “마스크 체온계 팔아요”...2억여원 가로챈 20대 구속 송치

인터넷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부터 4개월 간 인터넷 카페에서 마스크와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며 20명에게 판매 대금으로 2억6000여만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이용한 4개의 계좌 거래내역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 A씨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유통하는 도매업자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개천절 집회’ 70건 금지...경찰 “성향불문 모두 안된다”

### “코로나 차단 목적...제한 해제 시 개최 가능”



지난달 15일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후 청와대로 향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이 개천절인 다음달 3일에 예정된 10인 이상 서울 도심 집회 70건을 금지통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방역당국 집회금지 기준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보혁 단체 신고

행사를 불문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준 10월3일 개최 신고를 한 집회 70건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했다. 보혁 단체 9곳에서 신고한 중

로구, 중구, 서초구 등 주요 도심권 내 진행 집회 33건 등을 포함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개천절에 주요 도심권 대규모 집회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경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외 서울 지역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방역당국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금지통고는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종로구 교보빌딩 인근, 경북공역 7번 출구 앞 인도, 평화의소녀상 좌·우측 인도 등에 신고한 집회 7건에 대해 장소 및 인원 등에 대해 이뤄졌다.

경북공역의 경우 금지 구역이 아니나 대규모 집회 우려로 서울시에

서 개별 금지를 했고, 이후 경찰에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보수단체인 천만인무죄성방 운동본부가 신고한 세종로소공원·효자치안센터, 을지로입구 인근 집회와 서울역 등 도심 일대 행진의 경우에도 장소 및 인원 금지통고가 이뤄졌다.

이 단체가 강남역 인근에 신고한 집회와 교대역 등을 경로로 한 집회·행진의 경우 인원 등에 대한 금지통고가 이뤄졌는데, 대규모 집회 우려에 따른 서울시 개별 금지로 경찰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대국총)과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신고한 도심 집회 역시 장소 및 인원 등에 대한 금지통고가 진행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진보 성향 단체 측에서 신고한 개천절 집회 및 집합 행사에도 금지통고가 이뤄졌다.

정승호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